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5호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홈페이지 리뉴얼 www.sportscm.org

제8차 집행위원회(2021.09.24)

CNet포럼(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출전기회 또 잃은 도내 실업체육인 선수생활 '위기' 호소

김재경 경남신문 기자

코로나19 2년, 전문체육이 무너지고 있다

정문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스포츠폭력

동료·후배 학생선수 강간해도 10년 뒤 복귀 가능... '영구제명'서 처벌 완화 이유는

조효석 국민일보 기자

보호장구 없이 발차기 시범·스파링, 10대들 부상...체육관장 집유

신대희 뉴시스 기자

기타 스포츠 뉴스

“이용시간 달라도 격리” 실내체육시설 과잉 방역 논란

밤엔 이용 못하는 ‘346억짜리 체육공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1. 체육시민연대 홈페이지 리뉴얼

www.sportscm.org

2. 제8차 집행위원회 진행

2021년 9월 24일 **15:00 ~ 15:50** 온라인 비대면(ZOOM)

3. CNet 포럼 진행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정현우 |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 토론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희진 |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양민석 |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일시 : 9월 24일 **16:00 ~ 18:00** 온라인 비대면(ZOOM, FACEBOOK,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BM6U5TFgR0>



<https://fb.watch/8fU2q5VDwv/>

링크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전국체전 출전기회 또 잃은 도내 실업체육인 선수생활 '위기' 호소

정부가 내달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고등부에 한정해 축소 개최하기로 하면서, 출전 기회를 잃게 된 대학부와 일반부 등 도내 체육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102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을 치르는 것으로 예정됐다.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뒤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부만 개최하도록 하고 대회 방역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회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반쪽짜리 대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회 참가 인원과 운영 방식 등 세부안은 조정이 뒤따르게 됐다. 경남선수단은 애초 47개 종목 1789명(임원 453명, 선수 1336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일반부가 빠지면서 선수는 절반 이상 출전을 못하는 등 선수단 규모도 절반가량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고등부만큼은 학생 선수들의 입시 성적이나 진학 사안이 걸려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체육인들은 대학 및 일반부 선수들의 경우에도 운동부 존폐 등 선수 생활이 걸린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체전 성적이 향후 계약이나 연봉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년 만의 전국체전을 기대하며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의 허탈감도 크다.

진영삼 경남대학교 역도부 감독은 17일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공유하며 동의를 호소하고 나섰다.

청원자는 “2년간 경기들이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점점 목표 없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계속 이렇게 경기가 안 열린다면 스포츠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팀 선수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무작정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1시 기준 212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을 위해선 2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내 또 다른 대학 운동부 감독도 “전국체전은 주변의 관심과 함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성장도 하게 되고 평가도 받게 된다”라며 “막바지에 출전을 못 하게 된 선수들은 무기력해진 모습도 보인다. 다른 어떤 형태로든 경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오영 경남도체육회장은 “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는 반쪽 개최여서 아쉽다. 시도체육회 측에서는 정상 개최 또는 고등부에 이어 대학, 일반부까지 시기를 나눠 개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정부의 결정에 앞서 전국체전 정상 개최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전국체육대회는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라며 “특히 학생 선수의 진학과 대학·일반부 선수의 취업 및 직장운동부의 신설·해체까지 체육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우리 체육인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월요논단]

코로나19 2년, 전문체육이 무너지고 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정부가 불과 20일을 앞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를 대학·일반부를 제외한 고등부만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출전을 준비해 온 선수와 지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체전의 개최로 국가 전문체육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통해 국제체육대회의 상위 기량 유지는 물론, 선수들의 실업팀 진출 평가를 정당하게 받는 자리인 전국체전 대학·일반부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선수들의 취업기회 박탈은 물론 초·중·고·대학을 거치며 십 수 년간의 노력을 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방역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올림픽도 개최된 마당에 방역 소홀의 피해를 고스란히 선수들에게만 떠넘기는 면이 있어 정부와 체육계의 각성이 필요하다.

전국체전은 100년이 넘게 개최돼 오면서 일제강점기(1938년~1944년)와 한국전쟁(1950년) 때 말고는 개최되지 않은 해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행사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항일투쟁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준 국가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체전 미참가로 집행되지 않은 시·도체육회와 일선 학교, 각 팀에 지급된 체전경비를 회수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각 대학에 출전경비 회수를 통보한 상태이며, 체육계의 반발로 협의의 여지를 두고 있다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전문체육팀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대회 출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렵게 팀을 유지하고 있고, 각 협회도 대회개최의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협회를 꾸려가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대량 폐업과 실업, 기업과 가정의 어려움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체육 선수들도 하루하루 조여 오는 생계와 진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증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년간의 정체기로 선수 발굴 및 선발의 어려움으로 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문체부는 전문체육 인력을 다독이고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선수와 팀의 경기력을 높이는 방안과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할 터인데, 정부는 가뜰이나 적은 지원을 어렵게 쪼개고 아껴가면서 겨우겨우 출전경비에 보태려던 훈련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조치에 체육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 개최대회에 출전해야 하고, 실업팀 진출을 목전에 둔 선수 입장에서는 체전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도 훈련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도쿄올림픽 출전 성적에 대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금6·은4·동10' 한국, 도쿄 올림픽 종합 16위. 4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 메달 수 중국 88개(2위), 일본 58개(3위), 한국 20개(16위).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린다 해도 향후 20년 내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스포츠계에서 선수 양성은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춥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너무너무 배가 고파 운동이 어려웠던 시절. 선배 태극전사들의 피땀으로 일궈냈던 일본에 대한 승리의 환희가 계속 이어지길 필자는 기대한다.

전국체전 출전 보조금 환수 조치는 잘못된 행정이다. 반드시 부족한 종목 팀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올림픽에서의 상위 성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 정치인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이 쉬운 것처럼 이야기한 적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유소년부터 꾸준히 10여 년간 투자와 지원을 유지할 때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겨우 탄생한다. 이제라도 올바른 전문체육 지원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동료·후배 학생선수 강간해도 10년 뒤 복귀 가능... ‘영구제명’서 처벌 완화 이유는

강간 등 강도 높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학교폭력 가해자 선수도 10년 이후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정됐다. 애초 개선안 발표 당시 ‘영구제명’이었던 학교폭력 최대 처벌 수위가 대한체육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완화된 결과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 학교폭력으로 퇴학을 당할 시 각급 체육단체가 최고 ‘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던 기존안을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완화하는 안을 이달 중순 확정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상 ‘강간·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사유’로 퇴학 조치를 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이날 국민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 내용을 공문으로 지난 13일 각급 체육단체에 내려보냈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문체부는 당시 함께 발표한 자료에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따르면 완화된 해당 조치는 전국체전 뒤인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7일 이후 학교에서 퇴학 등 징계 조치를 받은 사항이 여기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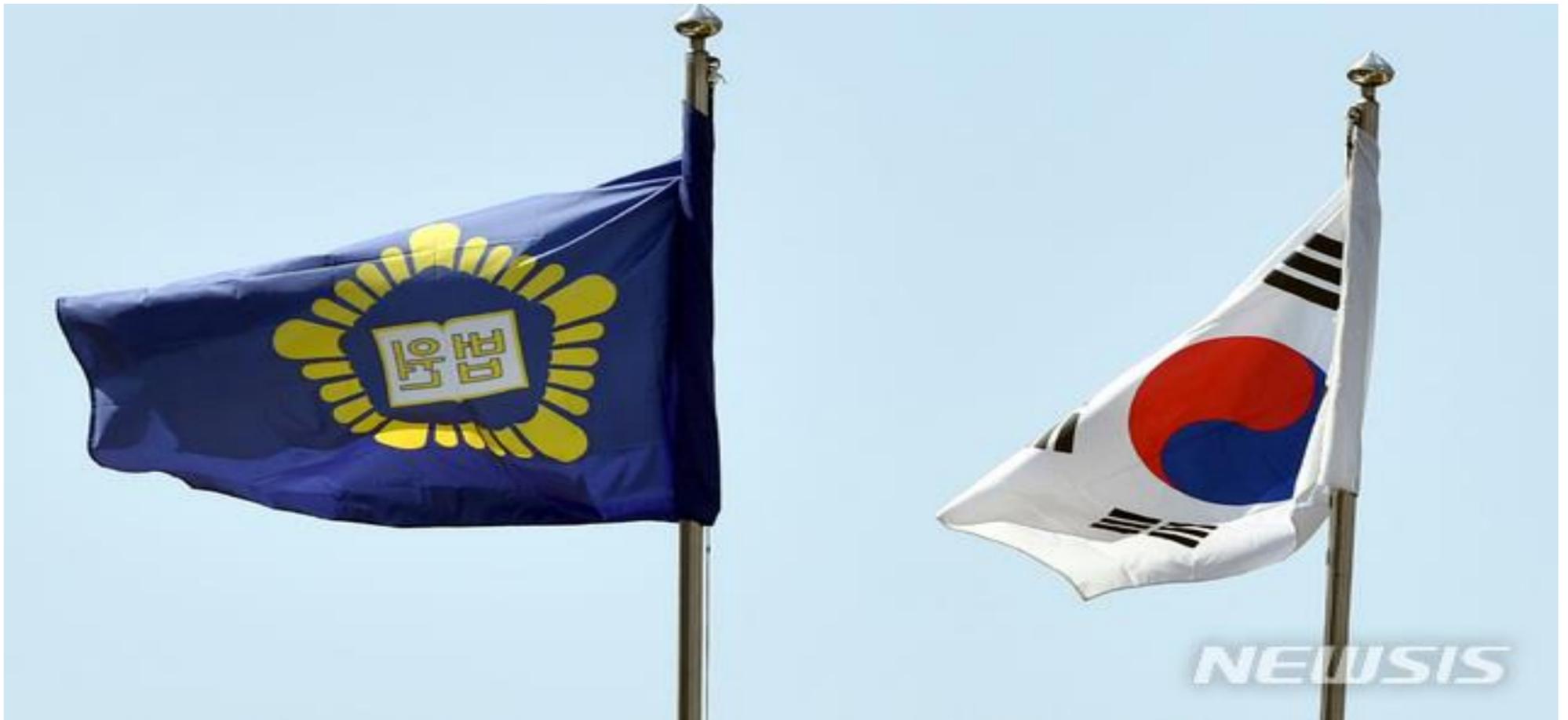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여는 대회 참가를 금지당하는 기간을 최대 10년 아래로 뒀다는 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을 당한 이도 10년 뒤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남겨놓은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경우 이들에게 복귀 자격이 주어지는 건 성인이 되고 나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기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한 가해자가 성인이 되고서 선수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애초 내세운 안에서 소리소문없이 후퇴했다는 점 자체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문체부가 징계 조치를 완화한 건 대한체육회의 이의제기가 이유였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최초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형사처벌도 10년형이 최대다.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면 판례를 참고했을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체부는 법률검토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퇴학당했을 때는 10년, 폭력 등 이외 사유 퇴학은 5년 선수등록 금지로 안을 낮췄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긴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면서 “(청소년 형사처벌과 같은) 10년 정도를 제약하면 사실상 선수 활동 재개하기가 어려우니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보호장구 없이 발차기 시범·스파링, 10대들 부상...체육관장 징유



보호 장구 없이 시합을 시키거나 시범 명목 발차기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킥복싱 체육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체육관장 A(34)씨와 B(25)씨에게 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모 킥복싱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 수업 과정에 보호 장구 없이 고등학생 수강생의 종아리·허벅지를 3차례 걷어차 넙다리 네 갈래근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체육관에서 킥복싱 지도 중 안전 장비(마우스피스 등)를 주지 않고 중학생 수강생에게 시합(스파링)을 시켜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없는 B씨를 체육관 별관의 관장으로 고용했다. A·B씨는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안전 수칙 숙지 교육도 하지 않아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는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자백·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하게 교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시간 달라도 격리” 실내체육시설 과잉 방역 논란

“숨이 차도 마스크도 벗지 않고 이용수칙을 다 지켰는데, 무조건 자가격리 하라니 억울할 수 밖에요. 혼자 최악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노모(34)씨는 지난 19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2주 통보를 받았다. 평소 다니던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다. 노씨는 다음날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격리조치는 변함이 없었다. 노씨로선 납득이 가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등 이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했고 확진자가 체육시설에 들른 날에는 동선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업무공간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대부분 상황이 해제되는 반면, 체육시설 자가격리 기준은 유달리 깡깡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당, 카페, 마트 등과는 달리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이용객도 격리조치에 들어가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쓰고, 동선도 안 겹쳤는데…”2주 격리하세요“

노씨가 다닌 체육시설에서 확진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크로스핏 수업에 참여했다. 관할 보건소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해 격렬한 운동을 하는 크로스핏의 특성상 이용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 같은 수업을 들은 회원 10여명은 물론 그 다음 수업을 들었던 회원 10여명에게도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다. 역학조사관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선이 겹치지 않은 회원들마저 격리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 업체 김지환(42) 대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격리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격리조치에 부담을 느낀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위드코로나 대비한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 ‘시급’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동 특성상 GX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GX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을 버티기는 것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적자가 지속되고 이달부터는 기본적인 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곧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 상황과 국민들의 피로감 및 수용도를 감안해서 방역지침과 격리조치 기준을 짜야한다”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밤엔 이용 못하는 '346억짜리 체육공원'



비행기 한 대가 지난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생활체육공원 상공을 지나가고 있다.

“노인들 쉴 수 있는 공원이나 만들지, 조명을 설치 못해 밤에는 사용할 수도 없는 체육시설은 왜 만들었답니까.”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생활체육공원에서 만난 주민 A씨(73)가 말했다. 체육공원은 한적했다. 주차장에는 차량 2~3대가 있을 뿐 사람들은 좀체 찾아볼 수 없었다. 축구장 펜스에는 ‘비행안전구역이니 드론 비행과 촬영을 금지한다’는 펼침막이 걸려있었다. A씨와 대화하는 동안에도 비행기 2~3대가 체육공원 상공을 지나갔다.

이 체육공원은 청주시가 346억원을 들여 지난 5월 개장했다. 전체 5만2746㎡ 규모로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췄다. 청주시는 3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인공암벽장과 야구장, 배트민턴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해가 지면 야외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축구장 등을 밝힐 수 있는 조명시설이 없어서다. 야간에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실내시설인 다목적 체육관뿐이다.

수백억원 예산을 들이고도 조명시설 하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체육공원이 청주공항 활주로와 불과 1.5km 떨어진 비행안전구역에 조성됐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은 17전투 비행단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내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도등과 같은 항공등화 이외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A씨는 “활주로 인근이라 조명 설치가 어렵다는 건 주민들도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직장인 동호인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 소음과 야간 사용 문제 등 탓이다. 이곳을 대관해 사용 중인 사회인 축구동호회 회원 B씨(43)는 “밤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낮에 오는데 이마저도 고역”이라며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귀가 멍멍해지고 옆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워 경기를 중단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군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체육공원을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전주화산체육관에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최적의 훈련 환경 제공"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3515686?OutUrl=naver>

[데스크 시각] 프로야구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나요?/이제훈 체육부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4030003&wlog_tag3=naver

대한체육회 29일까지 '유·청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사업' 공모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9220100151150009970&servicedate=20210922>

'2021 전국체전' 고등부만 출전 확정되자, 지역 체육인들 '한숨'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923010004421>

동계 체육인 숙원 전북 컬링경기장 드디어 짓는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44>

스포츠별 힘쓰는 근육은... '축구', 가쪽넓은근·장딴지근에서 파워·지구력

<https://zdnet.co.kr/view/?no=20210909131830>

"팬심과 홍보 둘 다 잡는다"...식품업계, 스포츠 마케팅 '활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1609&clD=13001&pID=13000

e스포츠 인력양성 시스템 '부재'...국감 이슈로

<https://www.etnews.com/20210923000155>

한체대 하웅용 교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분석한 '스포츠정책론' 출간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9241755003&sec_id=530101&pt=nv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